



무등산의 눈꽃 터널 광주·전남 지역에 5일째 눈이 이어지고 있는 20일 광주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원효사 입구에 핀 눈꽃 터널을 걷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장성, 무안, 함평, 영광의 대설주의보를 모두 해제했지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다. /최현배기자 choi@

■ 예산안 통과 지연...광주·전남 사업비 연내 확정 안되면

# SOC서 사회복지까지 '줄 핑크'

## 내년초 집행도 늦어져 지역경제 악영향...서민들 큰 타격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액이 각각 2조3천1억, 3조7천613억원에 달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장기간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대 '악재'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연내에 지역관련 예산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서민경제 예산, SOC 구축예산 등의 조기집행에 차질이 예상돼 국회 예산안 처리 일정 조정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2000년 이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경우는 2002년 한 해에 불과하다.

◇광주시=시는 12월 중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법정 기관의 운영,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비상대책이다.

시는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올 경우 공공근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에 큰 차질이 올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비 지원액수 2조3천891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사업의 적기 추진을 장담할 수 없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주요 신규 현안인 영산강 살리기 하천정비 1천581억원, 지역산업기반 IT 융합기술 생산지원 기반구축 150억원, 광융합 기술기반 그린 IT 도시 모델 실험사업 10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 확충 20억원,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과 산업용 레이저 핵심 모듈 국산화 지원 사업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이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예산안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연말에 예산안 처리를 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앞 당기는 방안과 회기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의 내년도 전체 예산 5조2천여억 원 중 절반 이상인 52.2%가 도민

복지 및 건강증진, SOC 확충 등 건설교통 및 주민 안전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정된 만큼 정부 예산의 연내 배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노인인구 및 저소득 계층, 농어촌 인구가 많은데 따라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크고, 국고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정부의 자금 집행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전남도 예산중 국고지원 사업비는 3조7천613억원 규모이며, 농수산·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남도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배정이 늦어질 경우 전남도의 서민생활 및 농어촌 지원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내년 국고 지원 신규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 내년도 국고 신규지원사업은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 ▲전남 해양레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영산강 하구

둑 구조개선사업 ▲도시종합개발사업 등 총 127건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지원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SOC 사업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SOC 사업의 경우 연초 건설사 공사비 지급 연기 등이 불가피해져 건설사 자금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일시적인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철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늦게 통과되면 정부의 자금집행이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 관련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F1 경주장 건설의 경우 전남도 재원과 PF로 우선 집행할 수 있지만, 여수박람회 관련 SOC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U대회 지원법 연내 통과 시켜라”

### 국회 문방위 내일 법안 심사...4대강 대치로 무산 우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최대 현안 법안인 국제경기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 22일 문방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관련 예산(30억원)도 반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광주 U대회 지원법 등을 심의한 뒤 23일 전체회의 회부를 결정한다. 광주 U대회 지원법이 23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오는 29~30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2일 열리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일정과 여야의 대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30억의 광주 U대회 지원 예산이 물거품 되는 등 성공적인 U대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조직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측에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국제적 신인도 하락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 등에서도 민주당 측이 미디어 랩 법안과 방승문화진흥회의 증인 출석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이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22일 열리는 소위에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호남에 크게 불리한 5+2 광역경제권 관련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물론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문방위 조영택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광주 U대회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무등경기장 시민품으로' 우수사업

### '예산 효율화' 국무총리상

국유재산인 무등경기장을 광주 시민들의 재산으로 되돌린 광주시의 시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광주시의 '1개 국유재산 분할 동시 복수 공유재산과 교환'이 우수사업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1개 국유재산 분할...'사업의 골자는 광주시가 시의 재산임에도 국가에서 무상사

용하는 등 자산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전산센터 부지를 정부에 이관하는 대신 무등경기장을 시 소유로 이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례없는 '국유재산 분할 동시 복수 공유재산과 교환' 방식을 고안, 끈질기게 정부 부처를 설득해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시가 국유 재산인 무등경기장을 시 재정을 투입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운영 모순과 예산 집행 비효율 문제를 동시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 '지역제품 구매' 작년보다 75% 늘어

전남도가 올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추진한 결과 공공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75%나 늘고 각종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도 43%가 증가하는 등 지역기업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9년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이 각종 공사, 공공구매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3조 493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작년보다 43.3% 늘어난 2조 1천765억 원을 기록했고 관

급자재·물품 등 지역제품 공공구매도 지난해 대비 74.7% 증가한 8천522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도와 시·군의 각종 관공활동으로 인한 판매실적도 총 5천705억 원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지역생산품 공공구매율, 기타 지역제품 관공지원 실적 등 3개 기준을 평가한 결과 무안·장성군과 광양시 등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실적을 토대로 내년에는 지역제품 구매운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98,000~

**일본 문화체험**

379,000w

419,000~499,000w

549,000w

1,260,000w

**무안에서 삼해로...**

359,000w

699,000w

729,000w

499,000w

499,000w